

조희대 탄핵안 전달한 조국혁신당… 민주당은 ‘신중 모드’

한병도-김준형 각 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 국감 이후 국조 추진 검토
혁신당, 구체적인 방안 논의 요청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공동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약 10분 간 회동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을 따로 전달했냐는 질문에 “특별히 전달한 것은 없고 조국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안이기에 때문에 여기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저기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감 이후에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

혔다.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 모두 발언 등 일부를 공개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강력하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행동을 촉구했다”면서

“진보 정당 공동 TF 구성과 10월 말 (김건희) 구속 만료 전 입장 정리를 요청했고 한 원내대표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에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회동을 마친 후 한 원내대표와 민주개혁진보정당 의원 전체에 친전을 발송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친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어느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숙고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며 “전달해 드리는 탄핵소추안의 취지와 헌법적 근거를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 올 민주당에 역풍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남은 재임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탄핵 추진의 실익이 적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는 조 대법원장 탄핵의 여론을 지켜보며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당 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당이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조희대 체제에서 국정농단의 사법적 책임이 흐려지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법원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운영위서 증인 채택·막말 논란 충돌

대통령 부부 출석 놓고 野 “성역 없어”
與 “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근거 대라”

여야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 국감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성역이 있는가”라며 맞섰다.

◆與 “정쟁 국감을 정쟁으로”…野 “누구든 의혹 있으면 불려야”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증인 채택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며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겠다”고 경고했다. 관저 거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취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국감 대상은 국정이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직무 권한도 없다”며 영부인의 활동을 보좌하는 업무와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관련 질의는 담당 비서관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정책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정쟁 국감이야

나라 정책 국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예외를 뒤흔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7개월째인데, 아직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남동 관저를 고집하고 있다”며 관저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 들어가면 흥을 맞다는 미신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 속사정을 아는 것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뿐이다. 그래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성역이 있는가”라며 “국회의원이 국정에 문제 있는 사람을 증인 신청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與 “의혹 있다면 근거 대라”…野 “김현지 인사개입” 사실확인 해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대라”며 누가 언제 어떤 인사와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제1부속 실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국감장에 불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사람 잡는 자리가 아닌 문제를 잡는 자리”라며 “(국민의힘은) 정책에 집중하고 자료를 많이 살펴봐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 등을 둘러싼 인사 의혹을 확인하려면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내란 부정·박지원 막말 논란에 與野 공방

여야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운영위원직 사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은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고 내란범”이라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5·18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 전체를 기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나라면 자살한다’고 발언했다며 맞섰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우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에서 도비 및 시비 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 쪽쪽’이라는 발언을 해 추문에 휩싸였다.

/박태홍 기자



후 대통령, 군산경찰서에 대통령표창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군산경찰서에 대통령표창(단체)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감찰관 부활 임박… 최길수 임명 초읽기

여야,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
대통령 주변 감찰체계 복원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조만간 재가동될 전망이다.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빠르게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 최길수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 참모(측근)들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찰체계가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를 약속했던 이 대통령의 공약도 이행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9일 합의를 통해 오는 2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최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생겨난 제도로,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지만 직무수행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간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계속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이 추진됐으나 국회 추천과정의 여야 이견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 관리와 별개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상시 감찰할 수 있는 법정 기구가 가동하게 된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권한이 맞물리거나, 고위 참모들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등을 감시하는 기구가 10년 만에 기능하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추미애 지사·부승찬 의원’ 경고

국가직 소방관 ‘재정 빨대’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향해 ‘재정 빨대’, ‘소방이 재정 쪽쪽’ 발언 등을 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

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방지 촉구를 의미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소방공무원의 재정 관련 제도 개선과 소방관들의 안전과 처